

이태원 유가족들 '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

오는 30일 국무회의 안건될 가능성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안 돼"
유가족 53명·시민 50명 159배 나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

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태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100여명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159배를 진행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고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159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논의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특조위원 11명 중 7명을 야권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 특조위가 행사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간의 법안 재협상 성사 여부를 주시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협과 대책위는 "이태원 특별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유가족과 시민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159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159배에는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를 착용한 유가족 53명과 시민 50명 등 총 103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선 채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절의 형태인 반배에는 유가족 12명과 시민 5명이 함께했다.



광주 남부소방, 의용소방대 정기소집교육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5일 의용소방대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진도소방, 박천조 소방서장 중점관리대상 등 현장지도 나서

진도소방서는 2대 소방서장으로 취임한 박천조 서장은 지난 10일부터 약 2주간 진도군 관내 중점관리대상 및 피난약자시설 현장지도에 나섰다.

진도=조상용기자



담양소방,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담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소방, 공동주택 관계자 소집 안전교육 실시

곡성소방서는 지난 25일 곡성소방서 다목적실에서 공동주택 11개소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해양경찰교육원, 간부후보생 졸업·임용식 개최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26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장 여성수 교육원장, 졸업생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졸업·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순천경찰, 마을 회관 방문해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순천경찰서는 작년 12월부터 마을담당경찰관 활동의 일환으로 마을 회관을 방문하여 담당마을 이장님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피해자 인권관계 증명부담 완화한 것"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장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두 차례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 같은 증상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심신장애로 인한 혐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보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

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생후 40일의 신생아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도 불가능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충격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우나기자

광주시, 설 연휴 환경 감시 강화 "24시간 상황실 운영"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감시활동은 사전 홍보·단속, 집중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뉘 추진된다.

광주시는 설 연휴 전에 1671여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도금업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악취 배출업체 등 환경 취약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에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지난 2019년부터 478개 시설에 총 272억원을 지원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설 명절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한파속, 빙벽 등반

인생을 걸고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2025 카라코람 6800m 미야르 피크 상그릴라 원정대"의 심권식 대장과 대원들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경북 봉화 청량산 중턱에 걸려있는 70M 빙벽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에 있을 원정등반에 대비하여 심층 훈련중이다.